

전임자 임금 금지·복수노조 3년 유예

노사정위원회 '로드맵' 협상 극적 타결 필수공익사업장 파업 땀 대체근로 허용

노사정 대표들은 11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을 조건없이 3년 간 유예하기로 하는 등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목표로 노사정위원회가 2003년 9월 논의를 시작한 노사 로드맵이 3년여간 논의를 끝낸 끝에 결실을 맺은 셈이다. 그러나 이번 노사정 협상에 불참한 민주노총이 로드맵 협상 결과를 야합이라고 비난하면서 총파업 등 강경투쟁 방침을 밝혀 로드맵이 입법화되기까지는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열어 2007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을 2009년 12월 말까지 3년 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상에는 이상수 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이윤덕 한국노총 위원장, 조성준 노사정위 위원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민주노총은 불참했다. 노사정은 또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를 폐지하되 필수공익사업에 필수 유지업무를 도입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필수공익사업장 범위도 현행 철도, 전기, 병원, 수도, 가스, 석유, 한국은행 등에서 혈액공급, 항공, 폐·하수처리, 증기·온수공급업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부당해고와 관련,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시 현행 원직복직 원칙은 유지하되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직장에 복직토록 명령하는 대신 금전보상도 허용하기로 했다. 노사정은 이어 부당해고 범죄조항을 삭제하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구제명령 불이행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경영상 해고시 현행 60일인 사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사 로드맵 3년 유예 협정식에 참석한(오른쪽부터) 이상수 노동부 장관, 이윤덕 한국노총 위원장, 조성준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이수영 경제총협 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협회장이 협약서에 서명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전통보기를 기업규모 등에 따라 30~60일까지 차등 설정하고 해고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근로계약시 근로조건 서면명시 대상에 현행 임금에서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중요원이 입사하면 반드시 노조에 가입하고 노조를 탈퇴하면 회사가 해고토록 하는 유니온승 제도도 현행대로 유지하되 복수노조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2010년 1월부터 다른 노조 가입과 결성을 가능하도록 했다.

필수공익사업장=업무가 정치 또는 폐지됐을 경우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는 공익사업장을 말한다. 철도, 수도·전기·가스, 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병원사업, 한국은행, 통신사업 등이 해당된다.

현장과 시각

축제 बे끼기 이젠 그만



송기동

사회2부 차장

최근 전남도가 '명랑대첩 승전 현상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임란 당시 전라우수영이었던 해남·진도지역을 중심으로 2011년까지 748억원을 들여 체험형 거북선 건조·명랑대첩 기념관 건립·전라우수영 복원 등 일련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순신 프로젝트'는 전남도뿐만 아니라 이미 경남에서도 1천440억원을 들여 5개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임란 최대 해전인 한산대첩이 그 근거다. (유람선형) 거북선을 보유하고 있거나 건조를 추진중인 자치단체는 광역단체인 전남도와 경남도, 기초단체인 여수시, 사천시, 통영시 등 모두 5곳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순신 장군을 테마로 한 축제는 여수(거북선 축제), 해남(명랑대첩제) 외에도 ▲충남 아산(성웅 이순신 축제) ▲경남 통영(한산대첩축제) ▲고성(당항포 대첩축제) ▲거제(육포대첩 기념제전) ▲남해(노량해전 승첩제) ▲진해(군항제) ▲서울 중구(충무공 탄생 기념축제) 등 모두 9개에 이른다.

이렇게 자치단체가 앞다퉀 잇따른 내용의 축제와 거북선 관광사업에 중복투자를 하면서 막대한 예산낭비는 물론 역사적 의미 퇴색, 경제적 효과 감소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유사한 축제는 비단 이 뿐만이 아니다. 전여축제는 광안과 보성 외에도 부산, 하동, 삼천포(경남), 서천(충남) 등 6개 지자체에서 열리고, 게다가 심청(곡성-충남 예산, 인천 동진군), 홍길동(장성-강릉) 등 고대소설속 등장인물을 둘러싼 자치단체간 '원조'논쟁은 법정으로 번지기도 했다.

이러한 베끼기식 축제가 판치는 현실에서 지난 6일 인접한 영광-함평-고창군이 '꽃무릇(상사화)'을 매개로 해 '광역 관광 벨트화'를 시도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동안 제각각 경쟁적으로 축제를 벌여왔던 3개군이 관광효과 극대화를 위해 '상생(相生)'의 길을 찾은 것이다.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속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도 그 자체만으로도 기대를 갖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논란중인 전남도의 '명랑대첩 현상사업' 역시 전남 지역경제 활성화와 역사테마 관광자원 구축이 주 사업목적이려면 좌수영, 우수영 편가름이 아니라 협력을 통해 상호보완해야 한다.

나아가 '이순신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전남도·경남도 및 '거북선 유람선 관광사업'에 올인하는 자치단체간에도 '상생'에 대한 거시적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song@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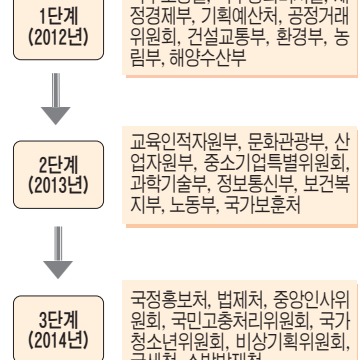
재정부·기획처 등 2012년 '행복도시' 입주 2014년까지 3단계 이전

행자부, 행정기관 이전계획 확정

재정경제부 등 49개 중앙행정기관을 2012년부터 14년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로 3년에 걸쳐 옮기는 3단계 이전계획이 확정됐다. 행정자치부는 11일 정부 기능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1.2단계에는 국무조정실과 재정경제부 등 정부의 상징적인 기관과 주요 경제정책 관련 부처를 이전하고 3단계에는 독립배치 기관과 각종 위원회 등을 옮기는 내용의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단계로 2012년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교통부, 환경부, 농림부, 해양수산부가 행복도시로 이전되고, 이어 2단계로 2013년 교육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

중앙행정기관 단계별 이전계획



부,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국가보훈처의 이전작업이 추진된다. 2014년에는 3단계로 중앙인사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법제처, 국정홍보처, 국가청소년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 국제정, 소방방재청, 영상홍보원, 우

정사업본부 행복도시로 옮겨지게 된다. 국세심판원과 무역위원회 등 소속기관들은 해당 중앙행정기관 등에 포함돼 이전 작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행정부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에 정부지는 중심행정타운 마스터플랜 국제공모전을 통해 기능과 기관별로 선정될 예정이라며 정부중앙청사는 수도권에 남게되는 행정기관을 재배치해 활용하고 정부과천청사의 활용방안은 현재 건교부 주관으로 용역을 실시, 연구중이라고 전했다. 충남 연기.공주 일대 7천300만㎡(2천212만평)에 들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중앙에 공원, 문화, 레저 등 시민들을 위한 330만㎡(100만평) 규모의 '오픈 스페이스'가 조성되고 주변은 20여개 생활권이 들어서는 외곽들레 20km의 '이중환상형 도시'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연합뉴스

'작통권 환수 반대' 성명 도미노

전직 경찰총수·외교관 등 시국선언 잇따라

현정부에서 경찰청장을 지낸 허준영 전청장 등 전직 경찰총수 26명은 1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시국선언'을 통해 전직 작통권 환수반대를 반대하고 한미동맹 강화를 촉구했다. 전직 총수들은 선언문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초래할 작통권 단독행사 논의를 중단하고 '대한민국 무장해제'를 기도하는 김정일과 공조할 게 아니라 한미공조와 국제협력력을 공고히 해야 한다"며 "일방적 대북지원 방식을 전략적 상호주의로 전환해 대북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와 공동 대처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국가정체성과 안보를 공고히 다져야 할 정부가 앞장서 한미연합사 해체를 추진하는데 침통할 따름"이라며 "국가안보와 치안을 맡아 평생을 바친 우리들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시국선언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에는 대표를 맡은 정상천씨 등

전직 총수 15명과 전직 경찰간부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외교부 장·차관, 대사 등을 지낸 전직 외교관 160명도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전직 작통권 환수반대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공로명 전 외무부 장관과 윤하정 전 차관 등 전직 외교관들은 성명에서 "전직 작통권 단독행사는 국민의 여론수렴과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하며 독자적 국방계획이 완전히 준비돼 이행되는 단계에 상응하여 실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직 외교관들은 또 "남북간 군사적 균형이 심각히 깨진 지금, 시한을 미리 정해 놓고 전직 작통권 단독행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정부는 현실적으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며 "안보 문제는 안이한 민족적 감성과 '자주'라는 구호에 지배될 수 없는 일이며 국내 정치에 이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북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06 광주노인일자리박람회

2006년 9월 13일(수) 9시~17시 / 영주실내체육관

활움에 도전하면 희망이 보인다!

구원처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업체 및 단체(기관)
구참석처 : 만 60세 이상 노인

주최 : 광주광역시, 광주노인복지회
주관 : 한국노인복지회, 광주노인복지회, 광주노인복지회
주최 : 한국노인복지회, 광주노인복지회, 광주노인복지회
주관 : 한국노인복지회, 광주노인복지회, 광주노인복지회

문의 : 602-702 광주광역시 남구 내빈로 41(아산아파트) TEL: 062-812-3839 FAX: 062-336-3238 www.silverwork.co.kr